전교조·시민단체 vs 교육감 당선인 '실력광주' 갈등

전교조·시민단체, 365 스터디카페 등 정책마다 '태클'

교육감 인수위 "공약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한 부분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교육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감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실력 광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23일 광주시교육감직 인수위에 따르면 이정선 시교육감 당선인은 '다양성을 갖춘 실력광주'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세부추진 계획으로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학교 365스터디카페 구축, 스마트 AI홈워크 프로그램 구축 등을 약속했다.

최근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들 공약을 취임 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전교조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이정선 당선자가 실력향상이라 포장하여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발표한 내용과 방학중 학생급식은 매우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들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학생의 성장과 실력향상인지, 최상위권 학생의 성적과 진학관리를 위한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광주형 진단평가 시스템은 자칫 일제고사 시절 학교 서열화와 교육 내용 획일화 논란을 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365스터디카페 구축'에 대해서도 "부족한 학교 공간의 문제와 학생들에게 고루 분배되지 못해 공정성 논란, 관리인력에 대한 '열정페이' 강요로 이어질 수 있고, 학생들을 다시 옛날식 과잉학습으로 내모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지난 22일 보도자료에서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의 고교기숙사 활성화 방침에 대해 선을 그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인권침해와 입사생 선발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9개 학교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했다. 21개 학교가 기숙사를 존치하고 있으나 실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은 9개 학교다.

이 단체는 "성적우수자를 관리하여 입시성과를 높이겠다는 낡은 발상으로, 해당 시책을 다시 생각해볼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며 "소수의 입시성과로 공교육의 성과를 자랑하려는 욕망이 있는 한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편법적인 내신 관리 등의 반교육은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감직 인수위측은 당선인의 공약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한 부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측은 "실력광주의 기본철학은 기초학력 신장, 진로·진학 등 학생진로를 열어주기 위한 다양한 실력향상을 말하는 것이지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세우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 365스터디카페 구축'도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상담·학생 동아리운영 공간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이며 특정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기숙사 운영자율권을 달라는 학교측의 요구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 광주지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생의회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어 이들의 여망을 교육정책에 어떻게 수용할지 관심을 모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시대 목조건축물 '희경루' 상량 고유제 23일 오전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에서 조선시대 목조건축물 '희경루'의 상량 고유제가 열렸다. 상량제란 건축물의 골격을 완성하는 상량(上樑)을 축하하는 의식이다. 희경루는 1451년 지어져 1866년 소실됐는데 전라도 정도(1018년) 천년을 기념해 복원사업이 추진됐으며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법 "지스트 이사회, 김기선 총장 해임은 정당"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이사회의 김기선 총장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봄메)는 23일 김기선 총장이 지스트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해임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김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스트 노조는 앞서 김 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지스트 측은 지난해 3월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고 이사회는 회의를 열고 사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사의 수용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당 소송 제기 이후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의되고 새 직무대행자도 선임돼 승소하더라도 법률상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반면 김 총장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이사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총장직에 복귀하자, 이사회는 지난해 6월 다시 해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김 총장은 해임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총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총장직에 복귀했다.

이날 1심 판결에서 지스트 측이 승소했으나 김 총장이 항소할 경우 김 총장은 내년 3월 초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스트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장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경찰 전사·순직 경찰관 추모비 제막식

청사 부지에 조성된 '광주경찰 추모공원'서

광주경찰청은 23일 청사 부지에 조성한 '광주경찰 추모공원'에서 전사·순직 경찰관 추모비 제막식을 열고 희생을 기렸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전사·순직경찰 유가족 40명을 비롯해 신임 임용환 광주경찰청장, 김태봉 광주시 자치경찰위원장, 광주시경우회·광주시 6·25참전경찰유공자회·경찰유가족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경찰청은 앞서 2018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선배·동료 경찰관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별관 건물 내 '광주경찰 추모관'을 조성했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추모탑과 추모비를 갖춘 추모공원을 새롭게 마련했다.

추모공원에 세워진 추모탑은 5개의 기둥으로 무등산 입석대를 형상화했다. 전체적으로는 추모비가 추모탑을 감싸 안은 모습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산화한 경찰 영웅들이 광주를 감싸 안아 지켜주기를 소망하는 의미를 담았다.

추모비에는 경찰 창설 이후 광주권 경찰서에서 전사·순직한 경찰관 253명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추모공원에 모신 경찰 선배님들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그리운 가족을 기릴 수 있도록 추모공간을 마련해줘 고맙다"고 사의를 표했다. 광주경찰 추모공원은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추모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징수

광주 남구, 강도 높은 추징 나서

광주시 남구는 세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를 압류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까지 징수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남구가 관리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약 1489명이며, 총 체납액은 77억 6100만원이다.

이 중 지방세를 2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919명이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49억 4300만원이다. 공공사업을 이용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수수료 등을 200만원 이상 미납한 세외수입 분야 체납자도 570명이다. 이들은 총 28억 18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남구는 세무1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등 7개 부서가 참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 징수제를 운영해 집중 관리하며,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수입물품을 구매할 경우 세관에 체납처분을 의뢰해 세금을 걷기로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